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지역건설업 '민·관 합동 세일즈단' 도내 대형건설사업장 방문 홍보활동 벌여
- '1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추가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 경남도, 미래 50년 준비전략 구체화
- 경상남도,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확산을 '생태건축학교' 개최
- 경상남도,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트타운 본격 착수
- 동서 통합지대조성 가시화
- 국토교통부,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관련 5개 시·도 공동합의문 발표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개청식 참석
- 창원시 '도시형 친환경 주거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창원시 하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탈바꿈
- 서울~김천~의령~거제 잇는 내륙고속철도 사업 '시동'
- 거창에서 한국도로학회 학술세미나 열려

목 차

■ 지식정보	12
○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체계 강화	
○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 진주 바이오21센터 정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선정	
■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	19
■ 신기술 정보	24
■ 건설기술심의 현황	25
■ 계약심사 현황	26
■ 기술인 나눔 정보	27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22개 전문분야, 93개 세부전공분야
전문가 249명을 대상으로

경남도는 오는 8월 31일자로 임기가
완료되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위원에 이어 새롭게 위원회를 이끌
어 갈 위원들을 오는 7월 1일부터 15일
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
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토목·
건축·항만·철도·플랜트분야 등의 각
종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22개 전문분야
에 93개의 세부전공분야 총 250명(위원
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
설기술관리법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되
고 있으며, 대형공사 실시설계의 기술·경
제적 타당성 등의 적정성 심의와 턴키·
대안·기술제안 입찰공사 등의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실시설계) 적격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심의한다.

경남도는 이번 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경남과 부산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건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자체 심사기준과 전문분야별
후보자 등록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최종
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전경>

위원 후보자 자격과 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홈
페이지에 게시하며, 후보자 등록은 인터
넷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장인
강해운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전문성
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기술인들이 많
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3

지역건설업 ‘민관 합동 세일즈단’ 도내 대형건설사업장 방문 홍보활동 벌여

도는 오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대형건
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산업 ‘민·관
합동 세일즈’를 실시하였다.

도 건설지원과는 침체된 건설 경기 속
에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
책의 일환으로 도 공무원과 건설관련 협회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세일
즈단’을 구성하여 도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방문,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를 당부하고,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 장비 사용을 확대해 줄 것과 지역 건설 기술자 및 노무 인력 채용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는 2013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3년 건설경기 전망보고서의 건설 경기 전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간의 수주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규 관급공사 발주계획(2억원 이상) 정보와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추천홍보 CD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협회 등 건설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함께 도의 건설경기 활성화 시책의 일환이다.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팀당 (055)211-4614

1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 양산시 등 10개 시·군 15개소 110억원 추가확보

경상남도는 '1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양산시 등 10개시군 15개소 사업장에 국비 추경예산 11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도내 사업장에 대한 준공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27개소, 사업비 3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 총연장 8.8km를 개선하게 되며,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통행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사회적 손해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본 사업의 조기 준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방문해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부진했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해당시군의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팀당 (055)211-4675

경남도, 미래 50년 준비전략 구체화

▶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향노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 마련

경남도는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시·군별로 총 36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그간 경남도가 미래 경남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추진해 온 6대 권역별 발전전략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선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본청 실·국과 시·군에서 핵심 전략 과제를 추천받아 시·군 및 경남발전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도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부합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군의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3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미래구체화 전략에는 경남도가 그간 적극 추진해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물론, 한방·양방 향노화 산업, 관광, 해양레포츠산업 등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시군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단지 조성, SOC 건설사업 등도 일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의 경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비롯하여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창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4건이 선정되었으며, 밀양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었다.

거제시의 경우 해양플랜트 생산단지조성과 더불어 장목관광단지 정상화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포함되었으며, 의령군의 정곡 일반산업단지, 합천군의 양전 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군 성장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향노화산업은 양산시의 양방 향노화산업, 산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의 한방 향노화산업 추진이 포함되었다. 통영, 남해, 고성, 거제, 창녕 지역의 테마관광산업 육성도 시·군별로 특성을 살려 반영되었다. 또한 마산 재건 프로젝트,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과거 중추도시의 기능을 되살려 경남의 미래를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 포함이 되었다.

경남도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은 “경남이 50년 후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선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사업을 도와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055)211-2313

경상남도,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확산을 ‘생태건축학교’ 개최

▶ 6월 5일 ~ 7월 17일, 매주 월·수요일에 열려

경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와 창원YMCA가 공동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생태건축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생태건축 이란** :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 이용으로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이 과정은 최근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따른 정신건강의 ‘웰빙’과 ‘힐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주거공간에서도 환경오염 없이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태건축’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도민들의 생태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환경 주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개최된다.

이에 따라 평소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참가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퇴근시간 후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진행된다.

첫날인 6월 5일에는 건축스튜디오 후리 이일훈 대표의 ‘사람을 살리는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여 매주 월·수요일 주2회 대학교수와 생태건축가 등 총10명의 전문가 강의가 이루어지고,

6월 29일에는 창원군 소재의 패시브 하우스형 건축물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주거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자원과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환경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태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기술을 전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 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문화에서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생태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생태건축학교가 건축물의 CO₂ 배출감소와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건축기술 보급과 도민의 건강한 주거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생태건축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일정	세부내용	강사	소속
7.1	<제7주제> ▪창원시 C-제로 하우스	신삼호	UA건축사사무소
7.3	<제8주제> ▪다시 흙으로 집짓기 그리고 다양한 흙 건축물	황혜주	목포대
7.10	<제9주제> ▪옥상과 벽면에 옷을 입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김철민	도시녹화
7.17	<제10주제> ▪골목길 공간주권과 주거지재생 ▪수료식	안재락	경상대 도시공학과

■ 자료 :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담당
(055)211-4134

경상남도,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본격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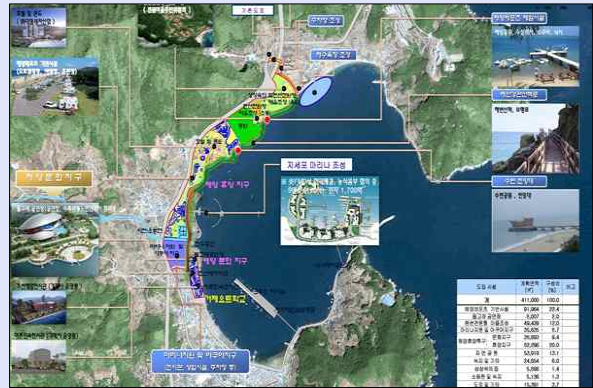
▶ 경남의 미래 50년 구체화 전략사업으로 선정

경남도는 미래 50년 구체화 전략의 하나로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거제 지세포항의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휴양시설 및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지세포항) 일원의 약 41만 1,000㎡의 부지에 2015년까지 424억 원(국비 53억 원, 지방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를 지난 5월에 착수하고 오는 9월에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착수하며, 주요시설로는 ▲공공부분의 경우 진입도로, 해변산책로, 주차장, 해수욕장 등의 기반시설을 ▲민간투자 부분은 콘도, 돌고래체험장, 펜션전원형 마을조성 등 다양한 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복합적인 가족체험형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어항, 돌고래체험장과 오토캠핑장 등도 조성하여 지세포를 찾는 이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한편, 거제 지세포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에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부산~거제~통영을 잇는 남해안관광의 거점축으로 가족체험형 관광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남해안발전담당
(055)211-6423

동서통합지대조성 가시화

▶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동서화합을 위한 공동사업 적극 발굴

경남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섬진강 일원의 도내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동서통합지대’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과제의 하나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6회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철 과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이어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현종 기획관이 경남지역을 방문하여 동서통합교량 설치지역,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등의 사업대상 예정지를 둘러보고 시군의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서통합지대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또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의 추가발굴을 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공모 결과 110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이번에 접수된 사업은 국토연구원, 경남·전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에 당선된 사업은 연말에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용역에 남부경제권 성장거점 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섬진강 연안 지역이 동서화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시 브리핑 전경>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남해안발전담당
(055)211-6423

국토교통부,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관련 5개 시도 공동합의문 발표

▶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 입지포함 연계 등 대부분 경남도의 의견 반영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영남권 5개 시·도 의견을 조율 및 반영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조사 추진을 본격화하였다.

이번 신공항 관련 공동합의문에는 신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연내에 발주하고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5개 시·도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등의 준비가 완료되면 착수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공동합의문 도출을 위해 5개 시·도 담당 국장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매 회의 때 마다 우리 도는 수요조사의 용역 범위 산정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존 공항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전환·잠재·환승수요까지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전환수요는 김해공항에 국제선이 모자라 인천공항 등 타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잠재수요는 신공항이 생겼을 때 유발되는 승객 수, 환승수요는 신공항을 거쳐 타 공항으로 가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수요는 신공항이 건설됐을 때 새로 발생하는 수요이다.

또한, 항공수요가 없을 경우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공동합의문(제1항)에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입지 등 포함)를 시행한다’고 입지와 연계 시킨 것도 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에 있어 수도권 외 동남경제권 세계화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신공항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견지해 온 바와 같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을 존중하고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지선정 결과를 수용하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책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자료 : 도 교통정책과 공항정책담당 (055)211-4493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개청식 참석

▶ 6월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청사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전경>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6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에 위치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개청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해 김오영 경상남도의회 의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지역 인사와 입주기관, 공사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경남정부합동청사에는 마산세관, 국립마산검역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창원보훈지청, 창원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7개 기관 270여 명의 공무원이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창원보훈지청 등 3개 기관이 입주한 상태이다. 나머지 기관은 오는 8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마산 서항지구 내에 산재해 있던 국가 기관 청사를 한 곳에 모아 예산절감을 물론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된 정부합동청사는 총사업비 592억 원을 투입, 지난 2011년 3월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공되었다. 2만 6160㎡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완공된 정부합동청사는 마산서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정부합동청사가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어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 자료 : 도 행정과 총무담당 (055)211-3213

창원시 도시형 친환경 주거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성주지구 3-2공구 전원주택지 조성
'중앙건설(주) 사업계획안' 당선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전원주택지(대지면적 15,566.8㎡) '도심형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건설(주)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 17일 공모작을 최종 접수한 결과, 2개 업체(창원 1개, 대구 1개)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6월 20일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앙건설(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계획안은 총 세대수 70세대(단독주택 34세대, 연립주택 36세대) 규모이다. 건폐율 24.4%, 용적률 59.2%의 저밀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비오톱 등 친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주택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심형 친환경 주거단지 당선작 조감도>

창원시는 중앙건설(주)과 빠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오는 7월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9월 중 착공해 연말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심형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이 기존 도심지에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 : 창원시 현안사업과 현안2담당
(055)225-6842

창원시 하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 으로 탈바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창원시 창원천, 남천에는 깨끗한물이 흐르고 하류의 마산만에는 2년 전부터 많은 수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마산만 뿐만이 아니라 창원천, 남천에도 상·하류를 막론하고 하천의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날아드는 왜가리와 하천 위를 떠다니며 먹이를 찾는 흰뺨 검둥오리 등 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창원천, 남천은 과거 산업화, 도시화로 하천의 모습이 훼손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매우 열악했던 하천환경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을 제거하고 꽃창포, 수크령, 갯버들, 물억새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하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었던 광경으로 생태하천이 조성되면서 하천수질과 수생동물 서식환경이 개선돼 하천의 물고기가 많아지고 난 뒤 나타난 결과이다.

창원천, 남천 두 하천의 수질변화를 보면, ▲창원천의 경우 평균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사업시행 전 13.3ppm에서 2012년 2.1ppm, 2013년 1분기에는 1.3ppm으로, 환경기준으로 볼 때 창원천은 VI등급에서 Ib등급으로 ▲남천은 사업시행 전 4.6ppm에서 2012년 2.5ppm, 2013년 1분기에는 1.2ppm으로, III등급에서 Ib등급 수준으로 각각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두 하천의 수생동식물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롱뇽, 참개구리, 유헤목이 등 6과 8종의 양서·파충류와 수달 고라니 등 8과 9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으로, 창원천 하류부 덕정교 인근지점과 남천 하류부 삼동교 인근지점에서 다수의 배설물과 족적이 발견됐다.

악취가 풍기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의 물고기와 새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태하천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의 도심 및 공단을 흐르는 창원천, 남천은 생태하천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고 현재 진행 중인 탐방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창원천, 남천을 비롯하여 총12개소에 2024억원을 투입해 2014년에 창원천, 남천, 삼호천, 산호천 등 4개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며, 사업이 진행 중인 8개 하천도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하천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이 될 것이며,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하천 수질 및 마산만 해양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 친수 휴식공간 제공 등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전경>

■ 자료 : 창원시 기획홍보실 공보관 공보담당 (055)225-2141

서울~김천~의령~거제 잇는 내륙고속철도 사업 '시동'

▶ 노선 통과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 '국회 포럼' 창립 활동 개시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 전경>

그동안 조기착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대선공약인 중부내륙선과 연결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통과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경남·경기·충북·경북지역 13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이 24일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발족하고 서울에서 김천과 합천, 의령을 거쳐 거제까지 철길을 잇는 내륙고속철도 구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포럼의 공동대표는 이철우, 윤진식 국회의원이 맡았다. 포럼에는 경남지역에서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이군현(통영 고성)·여상규(사천 남해 하동)·김한표(거제) 의원이, 경기도는 노철래(광주)·유승우(이천)의원, 경북은 이완영(고령 성주 칠곡)·이철우(김천) 의원, 충북에선 윤진식(충주) 국회의원과 김채용 의령군수를 비롯한 중·남부내륙철도 인접지역 시장·군수 등이 회원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창립대회와 함께 내륙고속철도 구축방안, 철도공약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내륙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및 철도공약 실천 촉구'도 결의했다.

포럼 회원일동은 이날 내륙고속철도 조기 구축 결의 및 대선공약 실천 촉구결의대회를 통해 "서울에서 거제를 잇는 내륙고속철도망은 국토 내륙의 부흥을 위해서도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계해 구축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중부내륙선 복선화와 남부내륙선 조기추진의 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철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이며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일동은 이어 350만 여 내륙주민과 함께 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하고, 박근혜 정부의 철도 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는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중부내륙선 복선화·고속화'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하라 ▲서울에서 거제를 잇는 내륙고속철도망을 구축하라 ▲복지재원 확보위해 교통 SOC 투자 희생될 수 없다. 철도투자 확대하라 ▲정부는 철도투자 확대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라 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채용 의령군수는 "한국경제의 물류 경쟁력과 내륙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내륙고속철도망은 꼭, 건설돼야 하며 특히 낙후된 경남북 중부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회원들은 앞으로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내륙고속철도의 조기구축 및 운영방향 제시, 내륙고속철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정책과제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정치권, 관련 지자체, 산학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의 장과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 자료 : 인형군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055)570-2101

거창에서 한국도로학회 학술세미나 열려

▶ 도로보장 보수방법, 지방도로 활성화 방안모색

거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한 국도로학회 영남지회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한국도로학회 영남지회 김광덕 회장과 이흥기 거창군수 비롯해 영남지회 회원 30여명과 거창군 시설직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 후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태순 교수의 ‘도로보수의 효율적 보수 방법 중 도로포장 보수방법’에 대해 전문기술자의 현장중심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도화기술공사연구소 진정훈 박사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도로 활성화 방안모색’을 발표했다.

한국도로학회 영남지회 고문인 이흥기 군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고, 기술 공유로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거창군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기술력 향상은 물론 폭넓은 사고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도로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전경>

■ 자료 : 거창군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055)940-3043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6.19일부터 20일간(6.19 ~ 7.8)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토목건축 / 토목 / 건축 / 산업·환경설비 / 조경
**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중 해당업체 시평액의 1/100 이하인 토건·토목·건축공사 입찰 제한

○ 이에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현행 제한업체) 토건업체 147개('1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시 제한업체) 총 202개 업체 : 토건 147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 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 수준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13.9월말 공포하고, '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7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 대책」 발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4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여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 보완

- ①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
 -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
 -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 강화

-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 추진 향후 5년간 1,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②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하도급자 - 근로자장비업자 관계)

-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 시행

③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등)

-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 검토
-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토건 → 타 업종)

◆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능동적인 점검·조사 실시

○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 모니터링

②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

③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 경감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체계 강화

▶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6월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은 지난 6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으로서,

○ 공정한 건설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 아니라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축되는 제도 이행실태 점검체계이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고 피해 업체들이 신고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한다.

- 뿐만 아니라,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점검사항(예시) >
-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특허, 신기술 등 예외사항 해당시 제외) 등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되며,

- 신고의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전문, 설비, 시설물)의 본부 및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각 기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매월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 국토교통부, 201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옥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개 교육기관(3개 과정)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13.6.11)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위탁교육 기관에는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기관별로 6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여 7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 한옥설계과정은 경상대·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 등 총 4개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과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각각 건설기술교육원과 (주)한옥과문화가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구분	한옥설계 전문인력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지원 금액	·5억2천만원 (각1억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교육 기관	·4개소	·1개소	·1개소
교육 인원	·교육기관별 45명 내외	·25명 내외	·25명 내외
교육 대상	·건축사, 예비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등	·한옥교육(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관련 학부생(3,4학년), 대학원생
교육 기간	·6개월 과정 * 160시간 이상	·3개월 과정 * 144시간 이상	·2주 과정 * 80시간 이상

동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설계와 시공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이를 통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생활에 맞는 수준 높은 한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각 기관별 교육생 선발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대학교 : 055-772-1761, 대한건축사협회 : 02-3415-6879, 명지대학교 : 031-323-6401, 전북대학교 : 063-219-5221, 건설기술교육원: 032-460-0131, (주)한옥과문화(강원대): 033-250-6210)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강석호 의원등 10명 발의)되어 6월 4일자로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작년 9월 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나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 /제조업	900억/626억 (약1.4배)	1,705명/920명 (약 1.9배)

-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며, 건축 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하여 왔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 가격입찰(57.7%), PQ+가격(18.5%), 설계공모(17.7%), 기타(6.1%)

('07~'12평균, 건수기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55

진주 바이오21센터 정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선정

(재)바이오21센터 이사장(이창희 진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인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 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고 생명건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과제명: 경남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며, (재)바이오21센터가 주관기관이고 기타 3개 연구소가 참여하게 된다.

(재)바이오21센터는 금번 사업을 통해 경남도내 바이오기업들의 생명건강산업 (항노화 관련 전통발효식품, 건강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유망품목 발굴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시장진출을 활성화 하고, 생명건강분야 지역선도기업육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매출 증대 및 지역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의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현장기술자문, 지적재산권 및 인증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사업화지원분야에서는 상품양산화지원, 디자인지원, 컨설팅지원, 안전성 및 효능평가 임상시험지원, 상품화 분석지원 등을 하게 되며, 인력양성지원분야에서는 생명건강 현장맞춤형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CEO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바이오21센터 이창희 이사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바이오21센터를 중심으로 생명건강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지역건강산업 육성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재)바이오21센터는 지난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인 약용식물을 이용한 살충활성물질 고효율 추출방법 및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분야에 바이오21센터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21센터는 미래 진주 발전의 밑거름이 될 『C·S·A(제대혈, 줄기세포, 항노화)의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GMP시설(우수 제조기준 인증시설) 및 장비구축을 위한 시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소재 및 화장품 개발 등 사업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진주바이오클러스터 전경>

■ 자료 : 재단법인바이오21센터 바이오21팀당
(055)771-13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3. 06. 1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37호)
- 예고기간 : 2013. 06. 19 ~ 07. 29.
-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5.28)'의 일부사항 이행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 나.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
- 다. 관리비에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 라.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 회의로 개선
- 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 바. 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 자.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 3370, 팩스 044-201-5684)

■ 자료 : 법제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06. 26(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66호)
- 예고기간 : 2013. 06. 26 ~ 08. 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최근 업종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자유로이 구획하거나 내장 재료나 장식물의 설치로 화재에 취약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 공간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안전하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작물의 붕괴방지를 위해 소유자 등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내건축의 용어 신설(안 제2조제1항 제20호 신설)

건축물 내부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으로 용어를 정의함.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안 제52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도록 함.

다. 공작물 유지·관리 점검 신설 (안 제83조제2항 신설)

옹벽, 굴뚝, 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붕괴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안 제14조제4항제1호가목S제2호 및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개정)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이들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이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공동주택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보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건축기준을 완화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의4제1호다목 신설)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기 위한 세대수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 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알람을 위한 서식 보완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개정)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서식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에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의 건축허가 취소 내용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
- 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 공간 면적 내용' 추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공적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적공간 면적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
- 라.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의 '감리원 철수 사유' 구체화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 1) 현재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3월 이상 요양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 '완료'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완료로 기재하는 경우 감리원 선정 평가시 감점 없음
 - 2) 퇴직, 입대, 이민, 사망이나 3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감리원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완료'로 기재하여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표 서식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추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건축사 등이 시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함.

□ 의견제출

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입법예고일 : 2013. 06. 0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65호)
- 예고기간 : 2013. 06. 05. ~ 07. 15.
-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공포('13.3.22)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 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용자 사업범위를 구체화(안 제81조제1항나목 및 제2항제2호) 법 개정('13.3.22)으로 특별회계 용도가 설치사업에서 정비·개량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
- 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안 별표1 제2호가목3)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시행규칙>

-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 자료 :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입법예고일 : 2013. 06. 0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84호)

□ 예고기간 : 2013. 06. 05 ~ 07. 15.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12.18 공포, '13.9.19 시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중대한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 1)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기능 발휘 곤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3384, 3389, FAX : 044)201-5532

■ 자료 : 법제처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대우건설
	(주)브니엘컨설턴트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00호
-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옹벽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관리 및 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된 중력식 옹벽공법이다. 본 공법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 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없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일 등 다양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블록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연결홀에 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옹벽 전체를 일체화 시킨 6m이하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하이드로코리아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대우건설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96호
-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설계 및 구조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교대(벽체)에 매립 시공된 강봉이 연직 관통하도록 제작된 강재거더를 교대에 거치한 뒤, 연직방향 강봉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긴장 및 정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합성전에 강재거더를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를 변경하여 발생 부재력을 제어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기술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강봉과 강재받침으로 구성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 단부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구조계를 연속보 형태로 변경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 심의일자 : 2013. 6. 19.(수)
- 요 청 자 : 창원시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3-05-01	대안입찰 설계평가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사업내용 : 방파제 설치 L=480m · 사업 비 : 310억원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주)대아건설컨소시엄 (88.95) :설계적격, 대안채택 고려개발(주)컨소시엄 (87.37) :설계적격, 대안채택

2013년 제6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횡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심의일자 : 2013. 6. 11.(화)
- 요 청 자 : 하동군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심의결과
2013-06-01	실시설계 (적정성)	횡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하동군 횡천면~청암면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9.3km, B=50~100m · 사 업 비 : 224.6억원(공사비173.2, 보상비등51.4)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조건부 채택

2013년 제7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 심의일자 : 2013. 7. 16.(화)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3-07-01	실시설계 (적정성)	당곡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8km · 사 업 비 : 247억원(공사비 170, 보상비등 77)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양산시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3년 제8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6건
- 심의일자 : 2013. 7. 12.(금)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3-08-01	경상남도 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도로과)
2013-08-02	경상남도 도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감리용역)	경상남도 (도로과)
2013-08-03	경상남도 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하천과)
2013-08-04	창원시 하수도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감리용역)	창원시 (하수시설과)
2013-08-05	진양호 농촌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녹지공원과)
2013-08-06	사천시 산업단지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실시설계용역)	사천시 (도시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6월	계	74	95,403	88,282	7,121	7.46%	
	공사	토목	33	65,224	59,976	5,248	8.05%
		건축	18	22,002	20,715	1,286	5.85%
		기타	9	4,064	3,635	429	10.55%
	용역	7	2,203	2,160	43	1.98%	
	물품	7	1,910	1,795	115	6.02%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기 간 : '13. 6월 ~ 9월
- 주 최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신기술제도 및 최근 개선내용 등 설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심사지정절차, 온라인 사후평가 시스템 활용방법 등 설명
 - (신기술개발자) 해당 신기술에 대한 공법, 기술개요 등 홍보
- 일정 계획

회차	지역	일 시	장소	대상기관
2차	충청권	7. 8(月) 14:30 ~ 17:30	장소 미정	21개기관 ----- 국가 : 조달청 등 7개기관 지방 : 대전시 등 7개기관 공사공단 : 수공 등 7개기관
3차	호남권	9. 13(金) 14:30 ~ 17:30	장소 미정	23개기관 ----- 국가 : 지방청 등 9개기관 지방 : 광주시 등 8개기관 공사공단 : 광주도공 등 6개기관
4차	영남권	9. 27(金) 14:30 ~ 17:30	장소 미정	30개기관 ----- 국가 : 지방청 등 11개기관 지방 : 부산시 등 10개기관 공사공단 : 항만공사 등 9개기관

- 참석 : 발주기관의 건설사업 및 신기술 담당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 담당자
 - 대상기관 : 전체 122개(국가 41, 지자체 33, 공사공단 38)

구 분	소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전 체	122	41	33	38
수도권·강원권	48	14	8	26
충청권	21	7	7	7
호남권	23	9	8	6
영남권	30	11	10	9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6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